



# 한국동북아논총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6 No. 2, June 2021, 095-112



## 북한 관련 ‘가짜뉴스’와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방안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Diagnosis and Countermeasures

김종수(Kim, Jong-Su)\* · 황수환(Hwang, Soohwan)\*\*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Dep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kuk University, 제1저자)

\*\*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팀장(Manager, Inter-Korean Exchange & Cooperation Research Center, Gyeongnam Institute, 교신저자)

#### 키워드

가짜뉴스,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대응방안

#### 초록

본 논문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 남남갈등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 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방안으로 다른 가짜뉴스의 대응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개별입법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적,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Keywords

Fake News,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  
North Korea Policy,  
Countermeasur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that has occurred since 2020,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situation. There is concer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nyone will distort and disseminate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may lead to distorted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social problems of the spread of inter-Korean conflict. As a result, there is a risk of causing a crunch in inter-Korean relations by acting as an obstacle to pursuing rational North Korea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 is a risk of advers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due to the spread of Korea risk. In order to solve these risk factors, social countermeasures such as opening North Korean data, establishment of a fact-checking organiz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nd training of experts related to North Korea were suggested. As a legal regulatory measure, it is necessary to strict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and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legislation.

As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is rapidly spreading widely through YouTube and SNS, it is necessary to quickly prepare and implement countermeasures.

논문 정보

논문투고일: 2021. 05. 13

심사완료일: 2021. 06. 15

게재확정일: 2021. 06. 25

##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허위 왜곡 정보 사례와 그로 인한 피해가 유난히 많은 분야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왜냐하면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한이란 존재는 늘 위기와 불안의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치하면서 휴전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북한 관련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정보 수요는 있지만 믿을 만한 정보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신뢰성 낮은 정보가 유통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면서, 이것이 북한 관련 허위정보와 오보가 난무하는 배경이 되었다.<sup>1)</sup>

2020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보름 정도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처음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대북 소식통’의 전언 형태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긴급 수술설이 보도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탈북자 출신 정치인의 사실 확인성 발언이 이어지고, 이내 사망설로 둔갑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sup>2)</su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한 소동은 2020년 5월 2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 현장에 참석한 영상을 방영하면서 마무리되었다.<sup>3)</sup> 북한체제 특성상 북한 리스크의 핵심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존속여부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최고위층의 유고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sup>4)</sup>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2020년 4월 한 달간 한국사회는 뒤숭숭했던 것이다.

북한 관련 최근 가짜뉴스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SNS 사용 증가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가짜뉴스의 전파와 확산에 대해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포데믹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전염병의 확산과 유사하다고 만들어진 용어로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와 확산현상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각종 법적 규제와 사회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 마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1) 구본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서울: 열린책들, 2020), p.11.  
 2) 김서영, “태구민 - 김정은, 혼자 일어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연합뉴스』, 2020년 4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065400009>(검색일: 2021년 2월 20일); 천금주, “‘김정은 사실상 사망설’까지 나왔다… DJ 청와대실장 패복글,” 『국민일보』, 2020년 4월 2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2366>(검색일: 2021년 2월 20일).  
 3) 임병선, “사망설·건강이상설 김정은 20일 만에 비료공장 준공식에,” 『서울신문』, 2020년 5월 2일,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2500007>(검색일: 2021년 3월 20일); 구본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서울: 열린책들, 2020), p.21.  
 4) 양무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pp.108-109.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이 마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역당국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해석적 방법에 의해 2020년 이전에 진행된 기존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2020년에도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중앙일간지와 유튜브 등 언론 매체에서 나타나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가짜뉴스의 개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보통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정보”,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는 거짓 정보”, “인터넷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 및 유통되는 허위 정보” 등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sup>5)</sup> 실제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의견상 단순한 거짓 정보, 유언비어 등의 유통과 쉽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오인을 유발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의도성의 관점에서 분명히 거짓 정보, 유언비어 등과 구별될 수 있다. 패러디 등 정치풍자의 경우 ‘오인을 유발할 목적’이 충족되지 않고, 오보의 경우에도 의도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 구별될 수 있다.<sup>6)</sup>

가짜뉴스의 개념에서는 ‘목적’이나 ‘의도’를 지니고 유포시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가짜뉴스 범위 안에서는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 가짜뉴스는 ‘허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허위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해 일부분 혹은 전부를 날조하여 만든 이야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가 의도와 목적을 지닌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과 허위사실을 구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가

5) 표시영·정지영,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권 제4호(정보통신정책학회, 2020), p.29.

6) 김가희, 「가짜뉴스 규제 방안: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p.7.

짜뉴스는 풍자로서의 가짜뉴스, 광고로서 가짜뉴스, 의도나 기준으로 구분하는 가짜뉴스, 내용을 허구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가짜뉴스,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전면부정 등 가짜라는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개인적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확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가진 특징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진영논리에 갇힌 집단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므로 더 극단화하는 ‘집단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짜뉴스인지 알면서도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듣고 싶은 정보만 돌려 보는 행동을 강화하는 이른바 ‘확증편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대한 호소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에 편승한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파편화하고 분단체제를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sup>8)</sup>

가짜뉴스의 유형에 대해 양무진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당·정·군 관료) 숙청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sup>9)</sup> 신변이상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피격설, 위독설, 사망설 등을 비롯하여 2015년 김경희 독살설이 대표적이다. 숙청형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노역형,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총살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형은 앞서 언급한 인물 중심의 신변이상설을 제외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폄훼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한 가짜뉴스들이다. 2020년 초 한국이 코로나 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시점에 국내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sup>10)</sup> 이렇게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데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정보의 접근과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데 있다. 국내의 북한연구자들 대부분이 북한에 직접 방문한 현장연구보다는 문헌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발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최고지도자나 권력층 내부의 이야기는 더욱 연구자를 비롯하여 북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유형으로 제시된 사항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이려는 거짓 정보”로 규정하면서 의도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최고지도자 및 중요 정치 엘리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다. 김일성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

7) 윤성욱,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 1호(한국언론법학회, 2018), pp.55-57.

8) 이관세·김동엽·이우영·이형중·임을출·박서화·장철원,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p.54.

9) 양무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pp.92-99.

10) 양무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pp.98-99.

의 사망 등 쫓겨난 상태를 주목하거나 김영철 등의 정치지도자 '숙청설', 김여정 '후계자설'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다. 인육도 먹을 정도의 처참한 북한 주민의 삶이나 핵무기 실험지역 인근 주민의 방사능 피폭, 북한체제의 폭력성 및 주민의 저항운동 등이 다.<sup>11)</sup>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가 의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성되어 유포되는 지에 주목한다.

### III.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가짜뉴스는 1986년 11월 '김일성 사망' 기사다.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이라면서 호외까지 냈고 당시 이기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김일성 유고설을 확인해 주었다.<sup>12)</sup> DMZ 북한 확성기에서 김일성 사망 소식과 장송곡이 방송되고 있고, 예정된 몽골 국가원수의 방북이 취소됐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즉시 UPI 통신이 김일성 주석이 평양공항에서 몽골 국가원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유엔사가 DMZ에서 북한의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한국의 부끄러운 관언 합동 오보 소동은 정리되었다.<sup>13)</sup>

2021년 초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통일노선을 수정했다는 칼럼도 가짜뉴스의 형태로 볼 수 있다.<sup>14)</sup> 해당 칼럼에서는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한반도 무력통일' 노선으로 대남 통일노선이 변경되었다면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 헌법보다 우선하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핵과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를 무력통일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다.<sup>15)</sup> 하지만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이 한국 사회에 공개된 것은 5개월이 지난 6월 1일이다.<sup>16)</sup> 1월 당 대회에서 발표된 것은 당 규약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서만이 채택됐을 뿐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 정부 및 북한연구자들도 이 결정서 채택 관련 노동신문 기사만을 근거로 경솔하게 의미와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남한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칼럼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통해 미리 예상에 기초해 단정적으

11) 이우영,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2020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설훈·조정식·안규백·홍영표·홍익표·권칠승·김한정·박정, 21대 당선자 김홍걸·박영순 공동주최), p.24.

12) "[호외]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조선일보』, 1986년 11월 17일; "김일성 피격 사망," 『조선일보』, 1986년 11월 18일.

13) 김현경, "북한정보의 허와 실," 『통일시대』 Vol. 164(2020년 6월).

14) 김민석,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대북 강경일색 바이든 행정부... 북, 옥쇄전략으로 버티나," 『중앙일보』, 2021년 2월 2일.

15) 노동신문에 실린 관련 당 규약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문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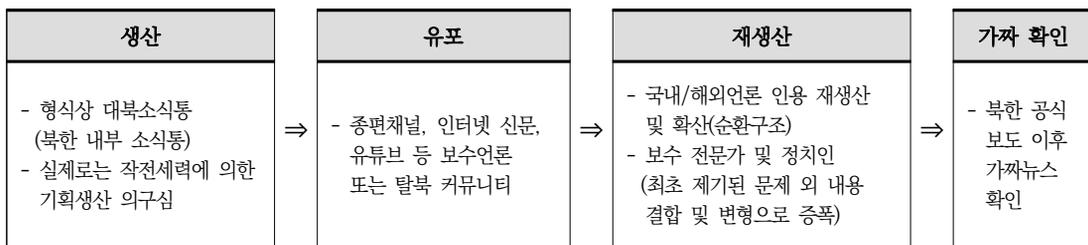
16)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한겨레신문』, 2021년 6월 1일.

로 서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치적 파장을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성이 강한 뉴스로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의 권위적 발언 등을 인용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마냥 뉴스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다.<sup>17)</sup>

이와 같이 북한 관련 뉴스들은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대북정보를 획득하려는 강한 정보 수요가 공급을 왜곡하여 나타난다. 북한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가짜뉴스 시장이 만들어 진 것이다. 북한 관련 뉴스의 정보 출처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사실인지 억측성 보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뉴스 출처에 대한 조사가 극히 어려운 폐쇄적 정보 여건에는 실낱같은 전언에 의존해야 하므로 오보가 양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된 뉴스 정보가 끼어들어도 팩트체크를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sup>18)</sup>

‘대북 소식통’이란 표현으로 생산되는 북한 관련 뉴스는 대부분 탈북자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일부 탈북자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에는 북한 사회 고유의 폐쇄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일반인이 당과 군 고위층의 신변이나 건강 상태처럼 북한 정부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기밀성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다.<sup>19)</sup> 탈북자들의 일부는 북한 사회에서 생활한 북한 체제와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북한 정보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0)</sup>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민주화 운동, 반북 인권운동 관련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 정보 유통 장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sup>21)</sup>

〈표 1〉 가짜뉴스의 4단계 유통 과정



※출처: 양무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p.101.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미국, 일본 정부와 정보기관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보조

17) 2021년 6월 1일과 2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 사실이 밝혀진 뒤, 북한 통일노선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8) 최은창, 『가짜뉴스의 고고학』(서울: 동아시아, 2020), p.129.

19) 구분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p.71.

20)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통권 제95호)(한국국방연구원, 2012), pp.161-188.

21) 김명준·임종섭,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통제’에서 ‘경쟁’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2호(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pp.56-87.

금과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일종의 북한 정보 유통 산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sup>22)</sup> 일부 단체는 미국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sup>23)</sup>

북한 관련 뉴스에서 등장하는 정보원의 '독립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정보원 뒤에 숨어 있는 특정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익명 정보원보다는 실명 정보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정보기관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데일리 NK, 열린 북한방송 등 일부 국내 인터넷 신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도 있다.<sup>24)</sup> NED는 1983년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미국 공보처의 통제를 받는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적대시하는 정부에 대한 민주화 혁명을 측면 지원하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sup>25)</sup>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수적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급증하였고, 정치사회적 관심 유도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적인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26)</sup> 대표적으로 '김홍광튜브'가 있다. '김홍광튜브'에서 2020년 초 평양 내부 소식통의 내용이라면서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북한에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제작하여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sup>27)</sup> 통일부는 해당 내용을 가짜뉴스로 판단하여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대변인 명의로 가짜뉴스 생산유도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적 검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김홍광튜브'가 북한 전문가라는 자신의 공신력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이자 사회를 분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시물로 판단했다.

북한 관련 뉴스는 다른 뉴스보다 외신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다. 통신이나 각국 주요 언론사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핵 관련이슈를 오랫동안 보도해 온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역시 미 클린턴 행정부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 때도 인텍스 가설대로 정부 관리들의 논의를 지침으로 삼아 보도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외신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근거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인과관계를 호도함으로써 '악의 축'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sup>28)</sup>

22) KBS, "나비효과, 대북 진단과 가짜뉴스," 『KBS 시사직격』, 2020년 7월 2일. [http://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71502](http://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71502)(검색일: 2021년 3월 30일).

23) 구분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p.68.

24) 이연철, "미 민주주의진흥재단, 4년간 북한 인권단체에 1100만 달러 제공," 『VOA(미국의 소리)』, 2020년 1월 10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238996>(검색일: 2020년 3월 20일).

25) 정아름·김성해, "공공의 적 북한은 만들어진다,"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p.122.

26) 이우영,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p.23.

27) 통일부, "코로나 마스크 남에선 동나고 북에선 넘쳐나 - 김홍광튜브(유튜브) - 가짜뉴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ounterfeitfakenews/?boardId=bbs\\_000000000000138&mode=view&cntId=1&category=&pageIdx=](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ounterfeitfakenews/?boardId=bbs_000000000000138&mode=view&cntId=1&category=&pageIdx=)(검색일: 2021년 3월 30일).

외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의존이 가지는 폐해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글로벌 뉴스 채널로 독보적 명성을 쌓아온 CNN도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4월 김정은 이상설이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CNN은 2014년 11월에는 ‘김경희 사망설’을 보도해 큰 파장을 불렀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도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이 고모 김경희마저 숨지게 했거나 자살했을 것이라 관측이 있던 참에 터져 나와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김경희는 2020년 1월 말 평양에서 열린 설맞이 공연에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참석하면서 가짜뉴스로 판정됐다.<sup>29)</sup>

국내에서도 파급력이 강한 유력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사례가 있다. 북한 내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특정 이슈를 제기한다. 종합일간지 보도 출처는 국가정보원, 탈북자, 미국 정보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에서 보도되면 곧바로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RFA(Radio Free Asia) 또는 VOA(Voice of America)를 통해 국제사회로 전달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터, CNN, FOX 등 외신을 통해 한국발 뉴스로 소개되고 국내에서는 이를 다시 ‘해외의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언론사 내부에서는 다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제 키우기’와 ‘의제 유지하기’가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공감과 설득 공략이라는 미명으로 대북 전문가나 권위자를 통해 소위 ‘명석 깔아주기’ 과정이 활용되기도 한다. 해외 칼럼을 번역하거나, 직접 칼럼을 요청하거나, 인터뷰하거나 또는 뉴스 안에 등장하는 정보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sup>30)</sup>

## IV. ‘가짜뉴스’가 남북관계에 끼치는 영향

### 1. 남남갈등 확산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 장애 조성

JTBC는 2018년 뉴스룸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내놓았다. 2018년 JTBC팀이 다뤘던 가짜뉴스 중 북한 관련 뉴스는 36%에 달했다.<sup>31)</sup> 또한 시청자가 뽑은 10대 가짜뉴스 중 4개가 북한 관련 뉴스였다. 응답률이 39%를 차지한 첫 번째 가짜뉴스는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 폭등’, 30% 차지한 2번째 가짜뉴스 또한 ‘정상회담 당시 태극기 실종’이 차지했다.<sup>32)</sup> 그

28) 이광엽, “북한 핵 사태와 언론의 대응: 뉴스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제1권(한국정치평론학회, 2007), p.196.

29) 이영중, “북한 제대로 알려면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국방저널』 통권 557호(2020년 5월), p.43.

30) 김성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위기의 북한뉴스 생태계와 복원을 위한 고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년 11월), p.88.

31) JTBC, “[팩트체크] 시청자가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JTBC 뉴스』, 2018년 12월 31일, [https://news.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9370](https://news.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9370)(검색일: 2021년 4월 2일).

32) 이관세 외,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p.15.

의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 등의 가짜뉴스도 2018년에 등장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의도하는 것은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소위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 훼손, 북한체제의 붕괴 지향,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 고양 등이라 볼 수 있다.<sup>33)</sup> 이렇게 되면 북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만 규정되고 교류협력은 무용하다는 주장이 양산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특정한 보수언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된다. 보수언론과 학자들은 북한이 일정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3대 권력세습을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숭배와 부패 때문에 개혁·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그래서 북한 관련 보도는 부정과 비판 일변도의 분석과 평가만이 나오고, 내부 소식은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sup>34)</sup> 결국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전반적인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2021년 2월 빅터 차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지에 코로나19, 북핵문제,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 주장했다.<sup>35)</sup> 북한이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은 빅터 차 교수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자력갱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위기가 체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왜곡이자 비약이라 반박했다.<sup>36)</sup> 북한 체제붕괴의 가능성과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설에 가까운 주장을 통해 왜곡된 결과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북한붕괴에 대한 빅터 차의 주장은 과학적, 논리적 근거없이 소설에 가까운 오류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 볼 수 있다. 오류에 기반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붕괴에 대한 희망적 사고가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과 왜곡된 시각이 결국 북한에 대한 정책을 왜곡시켜 한반도 평화 및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란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3) 이우영,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p.25.

34) 이관세 외,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p.142.

35) Victor Cha, “[Opinion] North Korea could become one of Biden’s biggest challenges - and not just because of its nukes,” 『워싱턴 포스트』, 2021년 1월 16일,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1/15/why-north-korea-could-become-one-bidens-biggest-challenges/>(검색일: 2020년 3월 20일).

36)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8 North’에 기고한 글에서 빅터 차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Kim Sang Ki and Choi Eun-Ju, “The Fallacy of North Korean Collapse,” *38 North*, 2021년 2월 1일, <https://www.38north.org/2021/02/the-fallacy-of-north-korean-collapse/>(검색일: 2021년 3월 30일).

## 2. '코리아 리스크'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적 악영향

2020년 4월 21일 미국 CNN이 '김정은 위원장 증태설'을 보도한 당일 국내 주식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는 한때 3%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급등했다. 1986년의 김일성 주석 사망설을 비롯해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설이 돌 때마다 주식과 외환 등 금융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며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뢰와 안정성을 요구하는 금융 시장과 시장경제 시스템을 저해해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키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외 투자자들이나 외국 신용 평가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sup>37)</sup> 오보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이 반복되면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는 수출 등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38)</sup>

북한 관련한 뉴스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뉴스(Good news)와 그 반대의 뉴스인 나쁜 뉴스(Bad news)로 구분해서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od news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KOSPI, KOSDAQ 시장 모두 지수가 상승한다. 반면 Bad news에 대하여는 KOSPI 시장에서 음(-)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KOSDAQ 시장에서의 반응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남북경협주의 경우 Good news, Bad news 각각 양(+), 음(-)의 값을 띄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sup>39)</sup>

가짜뉴스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1898년 2월 17일 조지프 폴리치의 '뉴욕월드'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뉴욕저널'은 첫머리 기사에서 앞다투어 '메인호 폭발은 폭탄 아니면 어뢰공격인가?', '메인호 침몰은 적의 소행이다'라는 확정적인 제목으로 마치 스페인의 공격으로 메인호가 침몰한 것처럼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여 대중을 선동한 사례가 있다. 이들 신문은 폭발로 산산조각 나는 메인호 침몰 장면을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화가의 삽화로 실었다. 사진도 아니고 자극적인 그림만으로 사실상 스페인의 소행인 것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미국 신문들의 선정적 경쟁보도로 미국은 스페인을 침공했고 그렇게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 전쟁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당시 폭발사고의 원인은 지난 1998년까지 100년 동안 모두 5차례 걸쳐 온갖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내려진 실제 조사 결과는 스페인의 기뢰 공격보다는 자연발화로 인한 폭발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sup>40)</sup>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

37) 홍지민, "무디스, 북한이 한국 신용등급의 변수," 『SBS 뉴스』, 2003년 4월 9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05670](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05670)(검색일: 2021년 3월 20일).

38) 구분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p.46.

39) 최재우, 「북한 관련 뉴스와 한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p.30.

40) 류희림,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서울: 글로세움, 2018), pp.37-38.

해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 비난과 반발이 나타나면서 상호 오류와 불신이 발생하여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 V.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 1. 사회적 대응방안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자료의 개방을 통해 가짜뉴스의 낱말을 막아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기존 정상회담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회담과정을 언론을 통해 '생중계'한 것이다. 회담에 참여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 회담 내용에 대해 언론의 해석이 필요 없이 국민들이 TV를 통해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개인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자료의 개방 확대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의 개입, 사실의 왜곡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여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짜뉴스 형성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로동신문 등 북한의 신문기사 제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차 모든 북한의 자료의 개방으로 확대하여 '선정선동자료'나 '특수자료'로 구분하여 일반인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sup>41)</sup> 북한자료의 개방은 북한자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왜곡과 가짜뉴스의 생산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료를 개방하게 되면 가짜뉴스를 국민 스스로 판별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화를 통해 한국사회와 국민들이 성숙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북한 자료의 공개를 통한 북한의 선동과 찬양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1970-80년대 동서독 TV방송 개방사례는 동서독 주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측면을 참고할 수 있다.<sup>42)</sup> 1990년대 후반 일본문화 개방 당시 우려했던 모습도 현재는 모두 기우였음을 증명한다. 북한 자료의 개방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며 편향된 대북관의 바로잡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연구소 및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예

41) 진천규, “북한 정보 및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과 방도,”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2020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설훈, 조정식, 안구백, 홍영표, 홍익표, 권칠승, 김한정, 박정, 21대 당선자 김홍걸, 박영순 공동주최), p.54.

42) 이준섭,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남북방송교류의 법제화 방안 연구(통일법제연구 18-19-②-04)』(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8), pp.35-76.

를 들어 미국의 비영리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포인터연구소에서 운영하는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다. IFCN은 팩트체크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불편 부당함과 공정함, 취재원의 투명성, 자금 조달과 조직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한 열린 자세라는 5가지 강령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3월 출범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팩트체크(SNU 팩트체크)가 있다. SNU 팩트체크는 국내의 방송과 신문사 등 20여개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슈가 되는 언론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연구기관과 언론사가 협업해서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바람직한 네트워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각 언론사가 팩트체킹한 이슈에 대해 다른 언론사가 교차 검증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의 경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리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완벽하게 가짜뉴스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sup>43)</sup>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일부, 언론기관,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북한 관련 정보검증 포럼을 마련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허위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sup>44)</sup> 대학에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가 발견되면 팩트체크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감시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셋째, 언론기관이 가짜뉴스에 스스로 대응하여 신뢰를 회복하려면 북한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부의 부정확한 정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고 사안을 다뤄나갈 수 있는 정보력과 경륜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북 전문가나 탈북 인사, 매체가 근거 없이 주장·보도한 내용이 며칠 후 미국과 일본의 매체에 크게 보도되는 나쁜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sup>45)</sup> 언론기관 스스로가 북한 가짜뉴스의 생산을 막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언론인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2. 법적 규제 방안

2021년 1월 28일 한 방송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였다.<sup>46)</sup> 이 보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43) 류희림,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pp.273-277.

44) 국민소통분과위원회,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갈등 해소 및 평화공감대 확산방안: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20년 2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7월), p.85.

45) 이영중, “북한 제대로 알려면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p.43.

46) 김도균,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530개 삭제 파일 포함)”, 『SBS 뉴스』, 2021년 1월 2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이란 제목 등의 파일을 근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고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부처에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sup>47)</sup> 그러면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결론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적시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면 핵무기 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대북제재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反)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sup>48)</sup>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4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라고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sup>49)</sup>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신,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시기에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자 법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가 있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sup>50)</sup>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 부족 그리고 예측 불가능은 잘못된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 범주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연구지원의 확대와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검색일: 2021년 3월 21일).

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2021년 1월 31일).

48) 이준성, “민주, ‘가짜뉴스 근절’ 위해 징발적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뉴스 1』, 2021년 2월 3일, <https://news.v.daum.net/v/cPNILFCr11>(검색일 2021년 2월 3일).

49) 뉴시스, “시민단체 “김종인, ‘北원전 의혹’ 허위사실 공표’ 고발,” 『동아일보』, 2021년 2월 1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1/105220041/1>(검색일: 2021년 3월 20일).

50)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이달의 입법민원』, 2020년 9월호, pp.20-22.

주로 온라인 매체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를 통해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짜를 만들어 내는 기술은 더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대응과 법적 장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1)</sup> 이에 유튜브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서비스<sup>52)</sup>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방송법’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및 3(정보의 삭제요청 등,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0조(벌칙, 비방목적 명예훼손) 적용을 통해 가짜뉴스의 차단 및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유튜브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진 점을 참고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헌법상 기본적 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가짜뉴스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준수, 중복규제 회피 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적 입법이 아닌 개별입법으로 가짜뉴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법 내에서 모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주요 사안별로 개별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방역 당국의 활동과 조치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참고할 수 있다.<sup>53)</sup>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참고할 수 있다.<sup>54)</sup>

51) 구분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p.131.

52) OTT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사업자,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를 의미한다. OTT는 기존 통신사와 방송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5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9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검색일: 2021년 3월 28일).

5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2월 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66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VI. 결론

가짜뉴스는 사회적으로 소모적이며 백해무익하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왜곡이 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정보 부족의 현상으로 가짜뉴스가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짜뉴스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더욱 기승을 부린다.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시에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수는 적게 나타났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진행되면서 가짜뉴스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초에는 김정은 신변이상설이라는 대형 오보이자 가짜뉴스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내부의 확인이 어려운 사실이 가짜뉴스로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실제적 모습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들은 단순히 가짜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왜곡되고 확장되어 인터넷 공간에 남아 확산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단순히 개인이나 국내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왜곡된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보다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게 되는 확장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식 왜곡, 남남갈등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 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규제방안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개별입법 차원으로 법개정으로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이 완벽히 가짜뉴스를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수준을 감안해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는 SNS 등 소셜 미디어의 정보 유통 속성과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지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논문이 주로 정책적 대안 제시를 강조하면서 추후 학술적 근거를 보완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사라지고 양질의 북한 관련 뉴스가 풍부해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본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서울: 열린책들, 2020.
- 국민소통분과위원회.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및 평화공감대 확산방안: 북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20년 2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7월).
- 김가희. 「가짜뉴스 규제 방안: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명준·임종섭.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사회과학 연구』 제23권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 김성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위기의 북한뉴스 생태계와 복원을 위한 고민.” 『한국방송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년 11월.
- 김현경. “북한정보의 허와 실.” 『통일시대』 Vol. 164(2020년 6월).
- 류희림.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서울: 글로세움, 2018.
-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통권 제95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양무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 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8.
- 이관세·김동엽·이우영·이형종·임을출·박서화·장철운.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 이광엽. “북한 핵 사태와 언론의 대응: 뉴스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제1권. 한국정치평론학회, 2007.
- 이영종. “북한 제대로 알려면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국방저널』 통권 557호(2020년 5월).
- 이우영.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2020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설훈·조정식·안규백·홍영표·홍익표·권칠승·김한정·박정, 21대 당선자 김홍걸·박영순 공동주최).
- 이준섭.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남북방송교류의 법제화 방안 연구(통일법제연구 18-19-②-04)』.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북한 원장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2021년 1월 31일.
-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이달의 입법민원』 2020년 9월호.
- 정아름·김성해. “공공의 적 북한은 만들어진다.”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 진천규. “북한 정보 및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과 방도.”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 대응방안 토론회」(2020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설훈·조정식·안규백·홍영표·홍익표·권칠승·김한정·박정, 21대 당선자 김홍걸·박영순 공동주최).
- 최은창. 『가짜뉴스의 고고학』. 서울: 동아시아, 2020.
- 최재우. 「북한 관련 뉴스와 한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표시영·정지영.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권 4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20).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김도균.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530개 삭제 파일 포함).” 『SBS 뉴스』. 2021년 1월 2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검색일: 2021년 3월 21일).
- 김민석.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대북 강경일색 바이든 행정부…북, 옥쇄전략으로 버티나.” 『중앙일보』. 2021년 2월 2일.
- 김서영. “태구민 -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걸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연합뉴스』. 2020년 4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065400009>(검색일: 2021년 2월 20일).
- 뉴시스. “시민단체 ‘김종인, ‘北원전 의혹’ 허위사실 공표’ 고발.” 『동아일보』. 2021년 2월 1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1/105220041/1>(검색일: 2021년 3월 20일).
- 이연철. “미 민주주의진흥재단, 4년간 북한 인권단체에 1100만 달러 제공.” 『VOA(미국의 소리)』. 2020년 1월 10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238996>(검색일: 2020년 3월 20일).
- 이준성. “민주, ‘가짜뉴스 근절’ 위해 징발적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뉴스 1』, 2021년 2월 3일. <https://news.v.daum.net/v/cPNILFCr1l>(검색일 2021년 2월 3일).
- 임병선. “사망설·건강이상설 김정은 20일 만에 비료공장 준공식에.” 『서울신문』, 2020년 5월 2일.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2500007>(검색일: 2021년 3월 20일).
- 천금주. “김정은 사실상 사망설 까지 나왔다…DJ 청와대실장 폐북글.” 『국민일보』. 2020년 4월 2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2366>(검색일: 2021년 2월 20일).
- 통일부. “코로나 마스크 남에선 동나고 북에선 넘쳐나 - 김홍광튜브(유튜브) - 가짜뉴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ounterfeitfakenews/?boardId=bbs\\_000000000000138&mode=view&cntId=1&category=&pageIdx=](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ounterfeitfakenews/?boardId=bbs_000000000000138&mode=view&cntId=1&category=&pageIdx=)(검색일: 2021년 3월 30일).
- 홍지만. “무디스, 북한이 한국 신용등급의 변수.” 『SBS 뉴스』. 2003년 4월 9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05670](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05670)(검색일: 2021년 3월 20일).
- JTBC. “[팩트체크] 시청자가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JTBC 뉴스』. 2018년 12월 31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9370](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9370)(검색일: 2021년

4월 2일).

KBS. “나비효과, 대북 전단과 가짜뉴스.” 『KBS 시사직격』. 2020년 7월 2일. [http://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71502](http://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71502)(검색일: 2021년 3월 30일).

“김일성 피격 사망.” 『조선일보』. 1986년 11월 18일.

“[호외]‘김일성 총 맞아 피살.’” 『조선일보』. 1986년 11월 17일.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한겨레신문』, 2021년 6월 1일.

Cha, Victor. “[Opinion] North Korea could become one of Biden’s biggest challenges - and not just because of its nukes.” *Washington Post*. 2021년 1월 16일.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1/15/why-north-korea-could-become-one-bidens-biggest-challenges/>(검색일: 2020년 3월 20일).

Kim, Sang Ki & Choi, Eun-Ju. “The Fallacy of North Korean Collapse.” *38 North*. 2021년 2월 1일. <https://www.38north.org/2021/02/the-fallacy-of-north-korean-collapse/>(검색일: 2021년 3월 30일).